광주시의회 교육청에 유치원 누리예산 편성 요청

2개월치 118억원 요구…보육대란 한숨 돌려 교육부장관·교육감협 부산서 만남…이견 여전

광주시의회가 유치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 보육) 예산 편성을 21일 광주시교육청에 요청했다.

시의회가 애초 어린이집 예산과 형평성을 맞춘 다며 전액 삭감했던 기존 방침을 바꾼 만큼 최악의 '보육 대란'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광주지역 유치원 원장들은 이날 시의회를 항 의 방문,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조영표 광주시의회 의장은 21일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에게 다음주 열리 는 임시회 때 긴급 추경안을 편성, 보육 대란을 막 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조 의장은 "당장,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이 끊기 면서 유치원 운영난 및 교사 임금 체불 사태가 빚어 질 우려가 커 대란을 막자는 취지로 2개월치 유치 원 예산 118억원 상당의 긴급 예산 편성을 요청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당시 광주시교육청이 편성한 유치원 누리과정 사업비를 시의회가 삭감한데다, 시교육청도 유치 원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책임지겠다는 입장 을 갖고 있는 만큼 조만간 유치원 예산 지원이 이뤄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의회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열리는 제 246회 임시회 기간 중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안 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해 광주시교육청의 교육비 특

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 정부 압박용 동력 을 확보하는 한편,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유치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598억 원을 전액 삭감했었다. 당시만해도 민의(民義)를 대 변한다는 시의회가 '어린이집이 없으니 유치원도 받지 마라'는 식의 논리로 교육청이 당연히 책임져 야할 누리과정 사업비조차 삭감했다는 비판을 받

'땜질'식 처방이지만 시의회의 입장 변화로 유치 원 운영난·교사 임금 체불, 유치원 폐원 등으로 이 어지는 최악의 보육 대란 사태는 막아 유치원 업계 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

반면, 전남지역은 유치원 원장과 학부모들의 항 의 전화가 끊이질 않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이 정부 의 목적예비비 지원을 전제로 유치원 뿐 아니라 어 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을 밝 혔음에도 정부가 지원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기 때 문이다. 상당수 학부모들은 정부가 보육 대란 사태 를 막기는 커녕, 교육청과의 대립각만 세우고 있다 는 불만을 터트리고 있는 상황이다.

전남도교육청도 정부의 답변이 늦어지면서 곤혹 스러워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측은 "정부의 목적 예비비 지원 계획이 나오지 않으면서 추경안을 제 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부산 해운대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 교육감



"누리예산 즉각 지원하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 소속 유치원 교사 20여명은 21일 광주시의회 의장실 앞에서 유치원 누리과정비 즉각 지원과 더불 어민주당 각성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농성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협의회에 참석, 사태의 극적 해법을 도출할 지 관심 을 모았지만 진전된 의견 접근은 이뤄지지 못했다.

시·도 교육감들은 이날 협의회를 통해 ▲어린이 집 누리과정 예산은 국고에서 해결하라 ▲누리과 정 시행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 위반을 해소하라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하라 ▲지방교육재정 총량을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10억대 가짜 경유 유통 광주북부경찰 일당 적발

10억원대의 가짜 경유를 제조해 유통한 일당 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북부경찰과 한국석유관리원 호남본부 는 21일 등유를 섞은 가짜 경유를 유통한 혐의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주유소 대표 박모(35)씨를 구속하고, 신모(32)씨를 불 구속 입건했다. 또 달아난 장모(50)씨를 쫓고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10 월까지 광주시 동구 수기동 한 주유소에서 식별 제를 제거한 등유를 경유와 2대 8 비율로 혼합 해 만든 가짜 경유 10억4000여만원 상당을 유 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심야시간에 박 씨의 주유소 내에 설치된 식별제 여과장치 2대 를 이용해 가짜 경유를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

경찰은 "경유와 등유는 기본적으로 무색이기 때문에 등유에 노란계통의 식별제를 첨가해 구 분한다"며 "범행 당시 경유는 ℓ당 1200원대, 등유는 ℓ 당 1000원대였지만 매입가가 경유는 1100원대이고, 등유는 600원대이기 때문에 막 대한 이익을 남길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전교조 항소심도 패소…합법노조 지위 상실

장휘국 교육감 "교원단체로 존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노조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소송에서 또 다시 패소했다. 지난해 11월 가처분 인용으로 효력이 정지됐던 고용노동부 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이 되살아나 전교조는 또 법 외노조 처지가 됐다.

전교조는 이번 판결에 불복, 상고의 뜻을 밝히고 다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낼 것으로 보여 법적 지위는 대법원에서 최종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황병하)는 21일 전교 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 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노조법 2조에 따라 야 한다"며 "실제 전교조가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분명하므로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법률에 근거한 행정규제로 볼 수 있다"고

고용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가 해직 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 를 했고, 전교조는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조법 2조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지만 헌재는 지 난해 5월 합헌 결정했다.

이번 항소심은 헌재의 합헌 결정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항소심마저 패소하면서 일시 정지된 고용부의 법 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은 다시 살아나게 됐다. 교육 부는 조만간 시도교육청에 후속조치로 ▲노조 전임 자 현장 복귀 ▲전교조에 지원한 사무실 퇴거 및 사 무실지원금 반환 ▲단체교섭 중단 및 단체협약 무 효화 ▲급여에서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단체협약 에 따른 각종 위원회에서 전교조 참여자격 박탈 등 의 이행을 지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광주·전남 교육청은 이를 곧바로 따를 것 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전교조 출신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전교조 가 법외 노조가 되더라도 교원단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기에 지금처럼 존중할 것"이라며 "광주 교육의 소중한 동반자로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 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이번 판결에 대해 "9명의 해고조합 원 때문에 6만여 조합원의 법적 권리를 박탈하는 것 은 지나치게 과도한 조치"라며 "민주주의의 성숙 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사 항과 국제노동기준에 부합된 교사 권리가 보장되어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